

# 전열 정비한 이재명號 民生 속도전

### 수석 사무부총장 김병기 유력

### 당직 인선 대부분 마무리

### 民生경제위기대책위 본격 가동

### 주 1회 현장 최고위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민생 드라이브를 강화한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와 소상공인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현장 최고위원위원회가 주 1회 개최하는 등 민생과 거리를 최대한 좁힌다는 방침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14일 수석 사무부총장 등 추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석 사무부총장에는 재선의 김병기(서울 동작)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 캠프에 합류한 이후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 대표를 적극 지원하는 등 신(新)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당의 싱크 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은 4선의 노웅래 의원이 내년 5월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인 안팎의 원내·원외 인사들로 꾸려지는 연구원 부원장직은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당직 인선을 통해 '이재명 체제'가 갖춰진 만큼 이 대표는 본격적인 민생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행보를 뒷받침할 당내 주요 조직도 출범 준비를 갖췄다.

당내에서 굵직한 노동계 현안에 앞장서 온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소위원회)'는 재선의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상설위원회로 재편된 소상공인위원회도 곧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 의원과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이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두 위원회 모두 민주당에게는 상징적인

위원회로 소상공인과 서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1호 지시사항'이었던 민생위기 관련 대책 기구인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돌입한다. 위원장은 4선의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 의원이 맡았다.

검찰의 기소 등 '사법 리스크'에는 최대한 반응을 자제할 채 민생 행보에 주력해온 이 대표는 당직 인선으로 전열이 정비된 만큼 민생 이슈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7일 경북 포항을 찾아 태풍 힌남노 피해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추석 연휴인 지난 9일에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바닷바람을 맞았다. 아울러 직접 현장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도 개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 행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전북에서 최고위를 주재할 예정이다. 주 1회 현장 최고위를 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지도부 '민형배 복당' 딜레마

### 정족수 미달로 청원 종료

### 현재 판단 이후 결정할 듯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당원 청원도 무산됐다.

13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민 의원 복당에 대한 청원은 지난 9일 최종 2만4530명이 동의하면서 종료됐다. 이에 따라 5만명 기준에 미치지 못해 청원은 성사되지 못했다.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청원은 30일간 당비를 낸 관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민주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 청원을 제기한 한 당원은 지난달 10일 "토사구팽하지 말고 민주당은 의리를 지켜달라. 민 의원은 검찰정당과 정국에서 본인을 희생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당심을 받들고 정치 효용감을 준 의원이다"며 "왜 아직도 복당이 이뤄지지 않는지 까닭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전조정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사실상 '꼼수탈당'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전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법안을 심의하는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1명의 위원을 배정한다. 이에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전조정위에 참여하기 위해 탈당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이 때문에 민 의원의 복당에 대한 고민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장 민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이려면 당 스스로 '꼼수 탈당'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을 위해 희생한 민 의원을 마냥 모른척 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있다"면서 "앞서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판단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방침을 내린 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김희재 “소년범 3명 중 1명은 재범자”

최근 5년간 '범죄소년' 수는 다소 줄었지만, 3명 중 1명은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만2752명 이던 범죄소년은 2018년 6만6259명, 2019년 6만 6204명, 2020년 6만4584명, 2021년 5만4074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범을 뜻한다.

그러나 '재범 소년'의 비율은 매해 30%대를 유지했다.

2017년 전체 범죄소년 중 재범자는 2만3989명으로 32.9%였다. 2018년에는 33.6%(2만2324명), 2019년 32.3%(2만1433명), 2020년 32.9%

(2만1279명), 2021년에도 30.2%(1만6350명)였다.

재범에 그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2017년~2021년 연간 재범 소년 가운데 50%가량은 3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2017년~2021년 24.1%~29.5%에 달했다.

김희재 의원은 "소년 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강력범죄 재범 소년들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외 다른 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정교화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이뤄져야만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김건희 특검' '대통령실 국정조사' 쌍끌이...“역주행 바로 잡을 것”

### 대통령실 진상규명단 오늘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일 대통령실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원내 선임부대표인 김정호 의원은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다"며 "야당 대표의 표적 수사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바로잡겠다. 윤석열 국정조사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소통부대표인 이정문 의원은 김 여사를 향해 "정치검찰 뒤에 숨어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요량이라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루빨리 버리라"고 했다.

지도부 주요 인사들도 아침 라디오에 출제어 출연, '특검·국정조사 동시추진'에 가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형치가 법치를 망치고, 검사가 정치를 망치는 망치정권"이라며 "특검을 자초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라고 쏘아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오죽했으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겠느냐"며 "검찰이 특정인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다른 특정인에게는 너무 솜방망이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의 법사위 통과를 위한 사전 압박전도 됐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본회의에만 상정되면 다수 의석을 활용해 통과시킬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문턱을 넘기가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처리하는 방안도 당내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법사위 소속 시

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혼자 지시기 어려워 보인다"며 입장 선화를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김원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처벌 강화해야”

영유아보육법상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보육해야 하는데도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이행강제금이 매년 2차례 최대 1억원까지 부과돼 여전히 설치의무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486개 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51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3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5개소의 사업장이 직장어린

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되지만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을 끝까지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 기업으로 의혹을 산 '다스'와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 업체인 '에코플러스텍'은 2017년부터 5년간 이행강제금이 각각 10건씩 부과됐다. 심지어 두 사업장은 올해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배짱 사업장들은 여전히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정부가 배짱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수익 - 380만</li> <li>▶ 연 수익 - 4,560만</li> <li>▶ 매가 - 6억7천</li> <li>▶ 용자 - 3억6천</li> </ul> <p>중심사업,유흥가능,전용 100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수익- 750만</li> <li>● 연수익 - 9000만</li> <li>● 매가 - 14억 (용자 7억)</li> </ul>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광산구 월곡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600 → 최저가 1억2천</td> </tr> <tr> <td></td> <td>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4억3천</td> </tr> <tr> <td></td> <td>북구 연제동 (근린상가) ▶ 감정가 7억2,200 → 최저가 5억</td> </tr> <tr> <td></td> <td>북구 신동 (아파트) ▶ 감정가 5억2,500 → 최저가 3억6천</td> </tr> <tr> <td></td> <td>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억2,400 → 최저가 1억4천</td> </tr> <tr> <td></td> <td>광산구 안정동 (공장) ▶ 감정가 33억5천 → 최저가 23억5천</td> </tr> <tr> <td>전남</td> <td>장성군 북하면 (주택) ▶ 감정가 3억8,500 → 최저가 3억8,500</td> </tr> <tr> <td></td> <td>나주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td> </tr> <tr> <td></td> <td>담양군 무정면 (주택)▶ 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6억</td> </tr> </table>	광주	광산구 월곡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600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4억3천		북구 연제동 (근린상가) ▶ 감정가 7억2,200 → 최저가 5억		북구 신동 (아파트) ▶ 감정가 5억2,500 → 최저가 3억6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억2,400 → 최저가 1억4천		광산구 안정동 (공장) ▶ 감정가 33억5천 → 최저가 23억5천	전남	장성군 북하면 (주택) ▶ 감정가 3억8,500 → 최저가 3억8,500		나주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담양군 무정면 (주택)▶ 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6억
광주	광산구 월곡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600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4억3천																			
	북구 연제동 (근린상가) ▶ 감정가 7억2,200 → 최저가 5억																			
	북구 신동 (아파트) ▶ 감정가 5억2,500 → 최저가 3억6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억2,400 → 최저가 1억4천																			
	광산구 안정동 (공장) ▶ 감정가 33억5천 → 최저가 23억5천																			
전남	장성군 북하면 (주택) ▶ 감정가 3억8,500 → 최저가 3억8,500																			
	나주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담양군 무정면 (주택)▶ 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6억																			
<b>010-6670-9800</b>		<b>062-382-5500</b>																		